

카리브공동체가 서방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하다

박병규

2014년 7월 1일부터 4일까지 카리브 해 앤티가바부다에서 개최된 제 35차 카리브공동체(CARICOM) 연례 정상회의에서는 카리브 노예제 배상 요구안(CRJP: Caribbean Reparatory Justice Programme)을 채택하였다. 이 요구안은 작년 34차 연례 정상회의에서 설치기로 합의한 카리브공동체 배상 위원회(CRC: CARICOM Repartions Commission)가 입안한 것으로, 과거 카리브 해에서 벌어진 원주민 대량학살과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 및 노예제에 책임이 있는 서방국가의 사과와 배상 요구가 주요 내용이다.

이번 배상 요구안에 포함된 카리브 해의 원주민은 1492년 콜럼버스가 이 지역에 도착한 이래, 대량 학살, 강제노동, 전염병 등으로 100년 만에 인구가 급감했으며, 현재 약 3만 명 정도 남아 있다. 아프리카인을 대상으로 한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과 노예제는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약 300여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에 아프리카에서 실어온 노예는 통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략 2천만 명이다. 이 가운데 1천만 명은 운송 도중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했으며, 1천만 명은 브라질, 카리브 해, 미국 등 아메리카 대륙 전역으로 팔려나갔다.

지금까지 인류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는 수도 없이 많다. 비근한 예로, 6백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양산한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60만 명에 이르는 또 다른 희생자를 양산한 나치의 집단 학살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인을 제물로 삼은 근대 노예제는 나치의 잔



제35차 카리브공동체 연례 정상회의

혹성을 뛰어넘는다. 우선 기간으로 보더라도 노예제는 300여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이에 연루된 유럽 국가만도 8개국(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 이른다. 근대라는 시기에 유럽 전체가 아프리카를 희생물로 삼은 것이다.

이처럼 유럽이 자랑하는 근대 뒤에는 아프리카인의 피 냄새가 배어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유럽은 그들이 저지른 반인류 범죄를 사과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하거나 적반하장 격으로 노예주의 손실을 배상하라고 큰소리를 쳐왔다. 이를테면, 180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아이티가 독립국가 승인을 요청하자 그 대가로 프랑스의 왕 샤를 10세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옛 식민지 백인들을 위해 아이티는 프랑스에 1억 5천만 프랑을 지불”하라는 칙령(1825)을 공포하였다(1844년에 9천만 프랑으로 감액하였다).¹⁾ 또 경제학자이자 트리니다드토바고 초대 수상을 지낸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가 1944년 『자본주의와 노예제』(Capitalism and Slavery)라는 책을 출판하여 노예제와 대서양

1) 심재중, 「아이티, 프랑스, 미국」, 《트랜스라틴》 13호 (2010년 9월), p. 20.

횡단 노예무역이 영국 자본주의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고 밝혔을 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영국은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함으로써 학문적 논의까지도 봉쇄하였다.²⁾

이러한 서구의 담론 봉쇄 전략을 깨뜨린 신호탄은 1993년 4월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서 개최된 제1차 범아프리카 배상 회의(Pan-African Conference on Reparation)였다. 아프리카 노예, 식민화, 신식민화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이 회의는 공식적으로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후원으로 이뤄졌지만, 그 배경에는 1990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 나이지리아의 부호 모슈드 아비올라(Moshood Abiola)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³⁾

이후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과 노예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국제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노예무역에 관여한 서방국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1998년 3월 아프리카를 순방하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우간다에서 들러서 “유럽계 미국인은 노예무역의 수익을 물려받았는데, 그 점에서 우리는 잘못했다”고⁴⁾ 유감 수준의 언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99년 8월 가나의 아크라에서는 카리브 해 국가를 포함하여 모두 14개국⁵⁾ 아프리카인 후손 대표가 결성한 아프리카 세계의 배상, 귀환 진실위원회(AWEETC: African World Reparation and Repatriation Truth Commission)는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에 대하여 서구는 777조 달러를 배상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류를 반영하듯이,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WCAR)에서도⁶⁾ 아프리카 노예무역에 대한 사과와

2) 이 책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64년에야 영국에서 출판되지만 호평을 받지는 못했다.

3) V. P. Franklin, “Commentary — Reparations as a Development Strategy: The Caricom Reparations Commission,” *The Journal of African American History*, Vol. 98, No. 3, 2013, p. 363.

4) James Bennet, “Clinton in Africa: The Overview; In Uganda, Clinton Expresses Regret on Slavery in U.S.,” *The New York Times*, March 25, 1998.

5) 구체적으로는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마르티니크(프랑스령), 과들루프(프랑스령), 미국, 영국, 코트디부아르, 나미비아, 가나,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자미비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Elizabeth Whittaker, “Toward Reparations Policy In Ghana A study of the Reparations Movement in Ghana, West Africa.”, *African Diaspora ISPs*. Paper 48. 2002)

6) 이 회의의 공식 명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배상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미국 대표의 철수와 프랑스 대표의 철수 위협 등 서방국가의 집요한 반대로 순항하지 못하고, “노예제도,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을 포함한 노예 거래가 인류 역사의 끔찍한 비극이었음을 인정하고”(제13항) “깊은 유감”(제99항) 천명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⁷⁾

이상과 같은 그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2014년 카리브 노예제 배상 요구안의 10대 실천방안(Ten Point Action Plan)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이 ‘공식 사과’인 것은 결코 의례적인 수사가 아니다.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포함한 노예제에 책임이 있는 서방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공식 사과하는 길만이 희생자와 노예후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영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7년 토니 블레어 당시 총리가 노예무역에서 영국의 역할에 대해 “깊은 유감”(deep sorrow and regret)을⁸⁾ 표명했을 뿐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감 표명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범죄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라고⁹⁾ 카리브 노예제 배상 요구안은 명시하고 있다.

10대 실천방안의 두 번째 항목은 아프리카 노예 후손의 본국 송환이다. 아프리카 노예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제 후손 중에 희망자가 있으면 아프리카로 귀환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외교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여기서 잠시 역사를 돌아보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노예해방을 전후하여 해방된 노예들이 아프리카로 귀국하여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을 건국한 바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아프리카 귀환(Back to Africa) 운동을 주창한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운동가 마커스 가비(Marcus Garvey)가 1919년 라이베리아 정부를 설득하여 아메리카 대륙에서 귀환한 흑인 정착촌을 세우려고

Related Intolerance)이다.

7)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www.un.org/WCAR/durban.pdf)

8) “Slave trade shameful, Blair says”, *BBC News*, 25 March 2007.

9) “Caribbean Reparatory Justice Program: Ten Point Action Plan”, *Pambazuka News*, 2014-04-16.(http://www.pambazuka.net/en/category/features/91378)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개인적으로 아프리카로 귀환한 경우에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현지에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노예 후손의 본국 송환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0대 실천방안의 세 번째 항목부터는 서구가 배상이라는 형태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다. 순서대로 열거하면, 카리브 해 원주민공동체의 활성화, 박물관 등 각종 문화기관 설치, 공중보건 문제의 해결, 문맹 퇴치, 아프리카 알기 프로그램 운영, 노예 후손에 대한 심리적 치유, 기술 이전, 외채 말소이다. 얼핏 보기에는 다소 무리한 요구 같은데, 그 배경에는 노예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종차별과 각종 정책 차별로 인해 카리브해의 아프리카 노예 후손은 현재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카리브공동체 배상위원회는 서국 국가와 협상 창구로 영국의 로펌 리데이(Leigh Day & Co)를 지정하여 첫 단계로 대화를 시도하고,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배상은커녕 정부차원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브공동체 배상위원회의 사과와 배상 요구는, 이제까지 주로 학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아프리카 노예제의 노예무역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한 고발과 비판의 형태를 벗어나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정치적 의제로 제기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박병규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